

동북아정세와 그 전망

이 기 택

〈연세대 교수〉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단순하지 않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볼 때에는 더욱 그렇다. 한반도 문제가 앞으로 격렬한 문제점으로 제기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국내 문제의 진행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교는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는 관점에서 봐야하기 때문이다. 그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몇가지로 구분하여 보기로 한다.

우선 탈냉전 이후 국가론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성격이 확연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특징을 두가지로 구분하면 그 하나는 「통합국가」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국가가 있으며 반면 「해체국가」라는 관점에서 그 특징을 볼 수 있는 국가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독일의 통합 과정이 아마도 「통합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해체국가」의 대표적인 경우는 확실히 구유고슬라비아인 지금의 보스니

아의 내전으로 국민을 보호할 중앙집권조차 해체된 국가가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탈 냉전이후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예외없이 「통합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해체국가」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주로 냉전 하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던 국가들이거나 서방과의 적대관계에 있었던 국가이거나간에 미소간의 대립의 해소는 동아시아의 국가적 성격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탈냉전이후의 국가론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어떻게 변하고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자.

우선 일본은 대내적으로 「해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엔고」현상으로 명치이래로 관료엘리트가 지배하

던 일본의 체제적인 전통이 와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를 극복할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아진다. 5~6년간의 총선을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형성하여 가리라 보여진다. 실제에 있어서 「오쿠라」(대장성)가 돈을 가지고 관료들이 일본의 전통적인 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의 미국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大和은행의 추방과 해체 통고는 일본의 대내정치의 해체의 단면을 보여준다. 「엔고」현상은 단순한 미일간의 경제문제에 한하는 것이 아니다. 미일간에 야기된 「엔고」현상은 실제에 있어서 일본의 핵심을 타격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대내정치의 해체로 이어졌으며 재편성을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탈냉전이후의 남한도 국가론적인 관점에서 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상 한국의 자본주의체제는 냉전으로 돈을 번 체제이다. 월남전쟁과 중동이라는 미소간의 대립사이에서 자본주의체제를 형성시킨 것이었다.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 원리라기 보다는 권력을 매개로 하여 돈을 버는 자본주의 체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탈냉전」이후 우리 자본주의의 대내적인 해체와 재편성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있다. 다만 어떻게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노현상」이 바로 이를 응변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정치체제에는 내재적으로 다른 나라와 다른 요인이 있다. 북한의 영향인 것이다. 특히 북한의 간헐적인 「군사적 압력」은 대내체제에 탈냉전이후 더욱 중대하다는 점을 우리는 잊고 있는 것이다. 도리어 냉전하에서는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적 지원이 예측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적 소련이 「해체」된 지금

미국은 군사적으로 내성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체제는 역리적으로 탈냉전이후 도리어 북한의 군사적압력과 대남공작을 더욱 실감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만 정치나 국민이 이를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밖에서는 도리어 남한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북한의 국가적인 해체와 재편성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체제적인 50년간의 권력의 이론은 「하나의 조선」정책이다.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북한을 통치하는 논리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 체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중공업우선주의」라는 특징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을 해방하기 위한 「대포」를 만들기 정책이 「중공업우선주의」인 것이다. 이를 「수정」하지 않고서는 북한의 체제적인 재편성은 불가능하다. 북한의 오늘의 경제체제「불균형」을 형성한 것은 남한을 해방해야 한다는 「하나의 조선」정책이 북한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냉전이후에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체제의 변화와 재편성은 정치정책인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해야만 오늘의 북한체제를 수정할 수 있다. 김일성의 권력의 논리였던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할 만한 새로운 세력은 「군부」밖에는 없다고 본다. 그러

나 북한의 군은 한층더 현재 휴전선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내정치보다는 대남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체제의 약화는 주변의 「전략적 관심」을 야기시킬 것이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시아라는 관점에서 북한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북한은 대내적인 해체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국경의 해체로까지 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남한이 북한을 흡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북한의 체제적인 모순때문에 한반도가 「독일형」의 「통합국가」로 나아갈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 이유다.

다음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해체와 재편성문제가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4원칙」이라는 공산당의 일당독재나 사유재산제를 허용치 않는 체제이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모순적인 대내체제를 형성하여 왔다. 그러나 등소평 이후에는 이러한 대내체제의 모순은 「중국인의 지혜」만을 갖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체제적인 해체과정을 걸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당, 당원, 군, 민간들은 모두가 시장경제에 뛰어들어 돈을 벌고 있고 또한 이미 벌은 것이다.

등소평이 사망하는 경우 중국의 경제체제는 혼란스러운 중국의 「사유재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

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가 국민이나 호텔까지 경영하는 군부보고 돈을 내나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해야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중국의 모순은 반드시 중국의 대내적인 해체과정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등소평사후 국가가 사유재산을 몰수하려 할 때에 과연 국민이 저항없이 돈을 내 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내적인 해체의 시발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탈냉전 이후 한국, 일본, 북한 그리고 중국의 국가적인 성격의 변화는 「해체국가」로 가는가 아니면 「통합국가」의 성격을 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의 대내적인 해체과정은 동북아시아의 발칸적 폭발적인 요소를 떨 수 있다. 이미 남한의 현상상은 남북한의 전체적인 해체과정을 예견케 할 수 있다는 전망을 특히 미국과 일본이 공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미일간에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하여 동해안에서 「섬탈환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탈냉전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각각의 특징은 다르나 한국, 일본, 북한, 중국의 체제적인 변화와 재편성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냉전에서 형성된 자본주의의 수정, 일본의 명치이래의 전통인 오쿠라(대장성)관료엘리트의 지배체제의 해체에서 보듯이 대내정치의 해체와 재편성, 북한은 남한을 「해방」한다는 전제위에 대포를 만들기 위한 「중공업우선주의」라는 경제체제의 불균형과 이에서 기인하는 정치체제의 모순과 해체, 중국은 공산주의원칙과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라는 이율배반적인 체제의 해체등이 각각의 특징을 지니면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